

데스크사각



김대성 제2사회부장

한 아파트 건설회사의 '에 낳으면 1억 준다'라는 정책이 설 명절 동네 친구들 모임의 화두가 됐다. 대한민국의 특색이 될까? 아니면 '저출산 포비아'가 기업 회장님의 특별 방침까지 나오게 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런 파격적인 정책에도 젊은이들이 쉽게 아이 낳기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아이 낳으면 18세까지 1억 원 지원, 생활인구 특별위원회 출범, 청년층 주거비용 지원 등 요즘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온갖 묘수를 동원하고 있다. 몇몇 지자체는 실제 주민등록 인구가 늘었다고 자랑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인구가 줄어 울상을 짓는 것보다 다행스럽고 대견해 보이긴 하지만, 그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인구감소 지역의 반등 비결 보니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는 신안군을 비롯해 전북 순창군, 대구 서구, 부산 동구, 충남 예산군 등 9곳이었다. 신안군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인구가 2023년에 3만 8037명으로 179명 증가해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인구 감소에 '역행'하는 지역을 이룩했다. 이들 지역의 인구 증가 비결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우선 추진한 인구 유입책들이 공

“뒤편, 1억 원 받고 아이 낳으라는 거네”

통으로 '생활인구 늘리기'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신안군은 인구 증가 주요 요인으로 햇빛 연금, 햇빛 이동수당 등의 경제적 지원과 1심 1무지업에 따른 문화적, 정서적 지원을 꼽았다. 신안군의 햇빛 연금은 지역 자연 자원을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태양광·풍력 사업의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지도읍, 임자면, 안좌면 주민들에게 분기별 최대 68만 원까지 지급되며 올해는 비금면, 증도면 등 전 읍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 1심 1무지업 정책도 지역 문화적 투자를 통해 지역 주민과 이주민들에게 풍부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며 인구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신안군의 분석이다. 전년 대비 37명이 늘어난 전북 순창군 역시 인구 반등에 성공한 지자체다. 순창군은 아동행복수당과 대학생 생활지원금, 노인 일자리 확대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편적 복지와 인구정책을 펼쳐왔다. 청년 근로자 종자 통장 지원·농촌유학 확대 지원사업이 최근 인구 증가와 청년층의 다른 지역 유출 방지 효과를 특목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인구 반등에 성공한 지자체의 배경에는 특별한 유인책이 있었으며,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과 혜택을 줌으로써 공동체 형성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한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인구에 근무,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인구와 출입국관리법상 등록 외국인 등을 포함한 인구를 말하는데 정주인구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일정 빈도로 특정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것으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이번 인구 반등에 성공한 지자체에 포함되지

는 않았지만,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해 인구 증가를 꾀하는 지자체로 강진군을 들 수 있다. 강진군은 은퇴자와 귀농·귀촌인 등 정주 인구 유입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 사업과 주택 신축 지원사업, 빈집 리모델링 지원을 추진했다. 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강진 푸소(FUSO) 체험과 푸케이션(푸소+워케이션) 운영, 병영 불금 불파 축제 개최 등 관광사업을 확대했다.

거주·체류 합친 '생활인구' 늘려야

이와 함께 지역 연계형 사업으로 '강진-광주 동구와 함께하는 지역 연계&협력 사업'과 지역 상생 강해영(강진·해남·영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사이버 군민제도와 각종 지원센터(맘편한센터, 늘봄센터, 어울림센터)를 운영해 성과를 냈다. 최근에는 2인 이상 가족이 강진으로 여행을 오면 소비 금액의 50%, 최대 20만 원까지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2024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전 단순한 행정인구가 아닌, 거주와 체류를 합친 '생활인구' 개념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가 됐다. 정부가 거주인구가 줄어도 생활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람들을 정주시킬 수 없다면 최대한 지역에 오래 머물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역시 생활인구 관련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순히 얼마 쫓겨 아이 낳으라는 막무가내식 정책을 버리고,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여러 연령층과 가족 단위의 체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 때만이 인구유입에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은펜칼럼



심명섭 한국문화재단이사

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디지털기기는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현대인의 생활양식을 변화시켰고, 이제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사용자 에티켓을 지키는 일 또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공공시설마다 사용 예절이 벽에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요즘 진행되는 각종 행사마다 사회자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소지하신 휴대전화를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다. 이러한 디지털기기 사용 예절을 '모바일 에티켓'이라 하는데 이는 사용자들이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다른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때 지키고 갖추어야 할 올바른 사용법과 기본적인 예의범절을 의미한다. 우리는 모바일 에티켓을 지키는 것은 상식이며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의 아니게 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설날 연휴 기간 시간을 내어 가족들과 함께 도서관 공영장에서 펼쳐진 연극 관람을 하던 중 생긴 일이었다. 공연이 한창 진행되던

디지털기기 활용교육 확대와 모바일 에티켓

중간에 갑자기 바로 앞자리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누군가 실수로 전원을 끄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관망하는데 문제는 한참을 지나도 계속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다들 숨죽이고 있는 상황에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의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앞자리를 보니 머리가 하얀 노부부가 소리를 끄려고 화면의 여기저기를 누르며 안절부절못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거꾸로 뒤집어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치한 후 휴대전화를 끄실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잠깐 말씀드릴 건 줄 알았는데 계속 울려서 더 당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노부부는 얼마나 민망했는지 잠시 후 머리를 감싸 쥐면서 손을 잡고 황급히 공연장을 손살같이 빠져나갔다. 연휴를 맞은 노부부의 행복한 시간이 휴대전화 벨소리 하나로 인해 방해 받은 참 쓸쓸한 광경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2%인 고령화 사회에서 2018년 14.4%인 고령사회를 거쳐 2025년 20.6%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인 중 과반수가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사용에 있어서 활용 방법을 잘 모른다고 언급하였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정보화 수준도 저연령층은 69.2%를 나타낸 반면, 노년층은 18.8%로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고 한다. 노부부가 겪었던 행동은 정보화 격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격차는 갈등을 낳게 되고 격차로 인한 무력감으로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가기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발자들은 디지털 기기에서 제공하는 위치기반 서비스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사용자들이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꾸지 않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기반 애플리케이션 등과 같이 에티켓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과기부에서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디지털 관련 교육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복지관 등 각종 서비스 기관에서도 교육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디지털기기 관련 교육을 지속해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로 인해 정보화 격차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에게 디지털기기는 단지 연락만의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각종 정보 검색은 물론 가족들과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해주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기반의 상징이다. 또한, 다양한 매체와의 소통을 통한 사회와의 연결고리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모바일 에티켓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구성원으로서 매우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보다 폭넓은 디지털기기 활용교육의 확대를 통해 모바일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가는 일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이다.

기고



박안수 남광주농협 사외이사 경제학박사

역사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초등학교 2학년 손자가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 중 누가 더 형님이며 누구를 더 존경하느냐고 묻는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세종대왕의 나이가 아마 200년 정도 앞서지만 두 분 다 존경하는 위인이라고 대답을 했다. 그럴 것이다. 우리 국민 중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마도 이 두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본다. 얼마 전 극장가에서는 '노랑:죽음의 바다'가 상영됐다. 지상파 공영 TV에서는 '고려판 세종'이라고 하는 현종의 '고려겨러전쟁'이 인기리에 방영 중으로 역사에서 승리했던 전쟁 중심으로 전개되는 듯 보인다.

영화 '명량' '한산' '노랑'에서 배우는 리더십

벌써 10년 전 우리지역 해남과 진도사이 울돌목(명량해협)을 배경으로 한 김한민 감독의 '명량(鳴梁)'이라는 영화가 역대 최고치인 1761만 명의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 모았다. 영화는 정유년인 1597년 경상도 칠천량전투에서 대패하고 겨우 남은 12척의 배가 있다는 장군의 소신과 당시 수군은 물론 진도, 해남 등 전라도 백성과 어선까지 동원해 군, 관, 민이 현연일체가 돼 해전을 치른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진왜란에 대한 시리즈 영화는 대접 순서가 바뀌어 상영됐다. 한산대첩이 임진년인 1592년 7월에 장군이 전라도우수사로 있을 때 한산도까지 진군해 학의 날개 형태인 학익진(鶴翼陣)으로 왜선 59척을 격파한 전쟁이었던 영화 '한산'은 '명량' 다음으로 상영됐다. '노랑:죽음의 바다'는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다. 노랑(露梁)은 경남 남해와 하동군에 위치한 마을 이름이다. 노랑해협 위에는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여행이나 신혼여행을 자주 갔던 우리나라 최초 현수교인 남해대교가 있다. 이국 역사 울돌목 정도는 아니지만 바다의

폭이 다소 협소해 물살이 상당한 곳으로 전시에 유용한 지역이다. 영화는 왜군의 패색이 짙어 사실상 철군하는 시점을 다루고 있는데, 장군은 인간적으로 이들의 전사, 모친의 죽음, 조정 일부 대신들의 증상모략으로 고뇌가 깊고 힘든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노랑해전 막바지, 통제판옥선에서 공격의 복을 치던 중 총탄에 맞아 전사하고 큰아들 회가 공격의 복을 쳐 왜선 45여 척을 격퇴하고 해전은 끝이 난다. 흔히들 리더십 관련 이야기를 할 때 문제와 답은 항상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다고들 한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자 하는 일념 아래 해전사(史)에 유일무이한 23전 23승의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어낸 원동력은 숫자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완벽에 가까운 준비와 지형지물을 최대한 유리하게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늘 청렴했고 참모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지도자로 솔선수범하며 권한에 정비례하는 책임을 다했던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이 시대 모든 리더와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한다.

社說

'이민청' 전남 유치, 명분·여건 다 된다

정부가 이민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민청의 공식 명칭은 '출입국·이민관리청'으로 법무부는 신설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민청을 추진하는 배경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국내 인구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반해 근로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거주자는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된 만큼 이민·이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민청 신설이 가시화되자 지자체들이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며 의욕적으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경기 김포는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를, 충남은 천안·아산과의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고 경북은 인구소멸 위기를, 경기 안산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거주 비율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전남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명분이 나 여건에 있어서 가장 실득력이 있다. 우선 전남도의 유치 의지가 가장 강하고 철저한 준비도 경쟁력이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직체계에 인구청년 이민국을 신설하고 이민정책과를 통해 이민청 유치 전략 수립 용역은 물론 민간 및 학계와 함께 맞춤형 이민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전남 인구는 4% 줄었는데 외국인인 41.5%나 늘어 증가율 전국 2위를 기록한 점도 유치 명분에 힘을 실고 있다. 영암군은 주민 7명 가운데 1명이 외국인일 정도로 많은데 92%가 몰려있는 삼호읍을 외국인 특화거리를 추진하고 있다. 내년이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도 완공될 예정으로 교통 인프라도 충분하다. 이민청 신설 목적이 저출생 고령화 대책에 있다는 점에서도 전남은 최대 적지다. 인근 광주에는 고려인 7000여 명이 모여사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고려인마을도 있다. 전남도는 광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이런 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유치전의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 뿌리가 같은 광주·전남이 이민청 유치전에서도 상생의 모델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쓰레기 양산 선물 과대 포장 규제해야

명절 연휴마다 광주·전남 아파트들은 '쓰레기 대란'을 겪는다. 이번 설 명절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자가 광주시에 자리한 아파트 단지를 직접 확인해보니 명절 선물세트 종이상자를 비롯해 완충재, 포장재 등 각종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었다. 주민들이 명절 뒤끝에 쓰레기를 한꺼번에 배출하면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마다 포화상태를 이뤘다. 더욱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구 버리는 것도 문제다. 재활용품과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쓰레기가 한꺼번에 뒤섞여 버리는 것이다. 설 연휴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대부분 명절 선물 포장재들이다. 선물세트는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을 완충재와 충전재로 활용하며 과대 포장됐다. 샤인 머스켓 등 고가 과일류는 3~4중으로 포장됐고, 버섯·견과류 등도 3중으로 포장돼 있다.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선물세트를 보자기로 싸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매년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과대 포장 규제가 절실하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광주환경공단 등은 매년 명절마다 합동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대포장에 대한 제한 기준이 느슨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두세 가지 종류의 포장재 쓰레기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실태가 현행법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명절 쓰레기 대란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선물 과대포장에 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명절 선물 쓰레기를 버릴 때 분리수거를 제대로 지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부는 선물 과대포장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지친 선물 포장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순환디자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無等鼓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는 '사칙연산'이 회자되고 있다. 사칙연산(四則演算)이란 산수의 기본이 되는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의 네 가지 연산을 말한다. 공천 과정이 진행중인 여야에서 덧셈과 뺄셈, 곱셈을 이용한 정치적 인)계가 공천 갈등을 빚으며 '덧셈 정치' '뺄셈 정치'가 논란이 되고 있고, 국민의 힘은 이를 겨냥해 '곱셈 정치'로 응수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당내 공천 과정에서 '뺄셈의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과 친명계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려고 한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정권 재창출 실패를 이유로 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친문 진영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겨냥한 것이다. 정권 심판을 위해서는 진보진영의 단합과 단결이 우선일텐데, 민주당이 친명계만을 위한 '뺄셈 정치'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사칙연산' 정치

정권 재창출 실패에 친문 진영 인사들만 책임을 물을 것은 아니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도,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도, 그 많은 국회의원들도 책임을 피할 순 없다. 친문계로 영입했던 그 많은 인사들이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친명계로 태도를 바꾸고, 친문계에 손가락질 하는 것도 못지 못할 일이다. 이 대표는 연일 당의 단합과 단결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변 환경은 그렇지 못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탈당 인사들까지 복당시키는 '덧셈 정치'를 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자신의 사람들을 공천하기 위한 '뺄셈 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를 겨냥해 '곱셈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3더하기 3이 6이 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 때문에 9가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다. 총선 후보 공천이 한창인 민주당도 이제 정권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법진보 진영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cki@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G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t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newspaper,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email addresse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editorial.